

“尹정권, 건보·노동정책 폐기… 전 정부 지우다 민생 퇴행”

민주당 현장 최고위…건강보험 개혁·주52시간제 유연화 비판 “국민의 삶, 죽도록 노동하는 과거로 회귀…계약 반드시 저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골자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했다”며 이를 ‘전임정부 지우기’로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만의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한 채 전임 정부의 정책들에 반기를 드는 행보만으로 진영간 편 가르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공식화했는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낮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 정부 탓하다가 민생까지 퇴행시킬 셈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료 남용 등의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과잉진료나 재정 불안이 존재한다면 정책을 수정·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주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윤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도 비난하고 나섰다. 전임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인 주52시간제에 무조건 반기를 드는 것으로 보고, 이 역시 ‘문재인 정

부 흔적 지우기’의 연장선으로 본 것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마저도 ‘죽도록 일하는’ 과거의 노동으로 퇴행시키고 있다”며 “‘저녁이 있는 삶’은 케녕 ‘주말도 없는 삶’이 미래의 노동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노동 계약을 반드시 저지해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리셋’이 정치 보복의 일환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등은 사법적 수단

을 통한 보복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뒤집고 나선 것은 정책적 수단을 통한 보복이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전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은 이어달리기인데, (윤석열 정부는) 그걸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며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도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청주 반도체 공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삼석,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5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2022년 국정감사까지 3년 연속 농업인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농어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과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올해 쌀값 폭락 문제에

대응해서는 6월부터 9월 1일 사이에만 민주당 국회의원 128인이 연명한 생명 등 기자회견 4회, 농해수위에서 대안 촉구 2회, 정책토론회 5회 주최 등 양국관리법 개정을 포함한 정부 대책을 끊임 없이 촉구해왔다. 연륙된 섬지역 택비의 추가배송비 폐지를 이끌어낸 것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큰 성과 중 하나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자산IC 진출로 설계변경 회의록 조작 감사’ 촉구

박수기 시의원, 5분 자유발언
광주시의회 박수기(민주·광산5)의원은 14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9년 자산IC 진출로 설계변경 과정에서 자문회의 회의록이 조작된 정황을 지적했지만, 광주시의 상용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광주시의 특별감사를 거듭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담당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이미 충분한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

가 제기됐음에도 최종 좌측 진출로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이 적연치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뒤 이에 대한 감사를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행정 불신을 방지하지 말고 시민 눈높이에서 책임을 다해 시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지원 “첩보 삭제 지시 받지도, 하지도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검찰 출석…“정치에 국정원 끌어들이지 말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연루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첩보·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뒤 대통령께 보고하고 안보실이나 통일부, 국방부 등을 지원하는 것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라며 “(국정원은) 정책 결정 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당시 정보 분석이 완벽하지 않아 이씨의 ‘자진 월북’ 단정이 성급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애국심과 헌신을 가지고 일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자세를 존경하고 신뢰한다”며 “분석관의 분석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당시 국정원은 서해 피격 사건이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 실장에 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이 같은 보고서 작성 취지를 묻자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검

‘주최자 없는 옥외 행사 안전관리’ 지자체가 관리

채은지 시의원 개정조례안 의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내용의 조례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제312회 본회의를 열어 채은지(민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주최자가 없는 다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서 광주시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밀집 행사를 ‘주최자 없는 행사’로 정의하고, 재난 발생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채 의원은 “연말연시 다양한 축제 및 행사가 예정된 시기에 대형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신안동, 상업용지

-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10층, 72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3억

대인동, 상업용지

- 롯데백화점 부근
- 대지 15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9층, 64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0억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 중 17층
- 계 14평, 전 9평
- 무등산 방향
- 일조권 전망최상
- 사무실 전용
- 매매 - 6100만원

덕남동, 임야

- 전대병원 부근
- 지분매매, 20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 그린벨트, 도로접
- 개발호재 많음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6천만원

상담 및 문의. 010 - 4159 - 9700